

# 민주 “이태원 참사 내각 책임 묻겠다” 국조·특검 동시 추진



“이태원 참사 국조·특검하라” 14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시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범시민 서명운동 진행...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방침 야당 탄압 비판 ‘장의 투쟁’ 재개...언론탄압 대응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 병행 추진을 공식화하며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참사 원인을 둘러싼 여론이 사실상 ‘정부 책임론’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추진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윤석열 내각의 전면 교체를 이끌어내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도 원인과 진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서는 (경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본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56.4%에 달했다”며 “이런 여론 앞에서도 집권여당은 귀를 틀어막고 민

심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결코 국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꼭 관철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책임자를 계속 두둔하고 보호하려 한다면, 이 장관을 포함한 내각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2개 야당·무소속 의원들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포

함해 총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가에도 기간 잠정 중단했던 전방위적 ‘장의 투쟁’도 이날부터 전면 재개했다.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검찰청을 찾아 정진상 당 대표 정부실장, 김용 민주당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김용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10월 19일 이후 20일간 피의사실공포가 85건이 있었다”며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침해다.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전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는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MBC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을 계기로 현 정부의 언론 탄압이 가시화했다고 판단,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자유대책특위를 당내 꾸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가사 수당’ 시작부터 제동

### 용역 심의 부결...市 “재추진”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3대 공약 가치 수당’의 한 축인 ‘가사수당’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최근 가사 수당 타당성 조사 용역 안전을 부결시켰다. 심의위원들은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급 대상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수당은 농민수당, 시민참여수당과 함께 민선 8기 광주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3대 공약가치 수당이다.

농민수당 도입은 내년부터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자치구, 농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시민참여 수당은 시 자체 테스크포스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가사 수당과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전

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 시기, 지급 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가사 노동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로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의를 다시 거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공감대 형성이 용역 과정에서 이뤄질 계획”이라며 “당장 시행을 전제로 한 설계가 아니라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었는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재명 “‘폼나게’ 발언 이상민, 즉각 파면해야”

### 민주당 최고위 회의...“참사 현장 앞에서 국민이 용서 못 할 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 그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참사’와 관련해 야권의 사퇴 압박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누군가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지는 사람

은 오로지 일선의 공무원들, 현장의 국민들”이라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전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이 필요하다”며 “국조가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신용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던 ‘김진태 사태’의 여진이 계속된다”며 “정부는 시스템 정비에 서둘러야 하며 대한민국 채권 금융 시장에 대한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부는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 일선 학교, 간판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 신수정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은 14일 “광주 일선 학교가 최근 3년 동안 간판과 사무실도 없는 업체와 1억6000만원의 공기청정기 필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A업체 주소를 직접 방문한 결과 사무실도 간판도 보이지 않는 업체였다”며 “같은 주소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B업체는 광주 관내 30개 학교와 직속기관의 전산 유지보수 업체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B업체는 컴퓨터 기자재 등의 종목을 다루는 사업자인데도 광주 의 한 학교가 B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270여만



원을 들여 공기청정기 필터를 사는 등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1인 수의계약과 관련해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선 학교가 깨끗한 계약행정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천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업종과 관계없이 납품계약을 할 수 있다”며 “공기청정기 필터는 소모품으로 유지보수 개념이어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중학교 학교 배정, 현실 반영 못 해”

#### 서임석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광주시의회 서임석(민주·남구1) 의원은 14일 “광주지역 학령인구 감소,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원거리 통학 등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학교 학교 배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중학교 배정방식은 지난 2001년 개정 고시된 ‘광주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교’ 정책에 따라 배정이 되고 있다”며 “배정방식은 10개 학교군, 3개 중학교(대촌·평



동·임곡)인데 20년이 지난 현재 대규모 신규아파트 조성 등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군 간 분포 차이, 선호학교 편차 등으로 인해 개발지구 근처의 A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B학교는 과소학급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 2. 약 4800평

# 3. 매매 - 16억 8천만원

# 4. 문의 . 010 - 3605 - 5000